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과 민주주의 의식의 변화*

윤성이 | 경희대학교

각종 민주주의의 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답을 대의민주주의와 소셜 네트워크 정치참여 간의 충돌에서 찾고자 한다. 개인의 민주주의 의식을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대표'와 '참여' 간의 선호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젊은 층과 진보성향 그리고 SNS 이용집단을 중심으로 불만족하고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결국 현재 우리사회의 세대 및 이념갈등은 단순히 선호하는 정치세력의 차이보다는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기술발달과 사회변화의 상호관계에 대해 어느 요인이 변화를 추동하는가에 따라 기술결정론과 사회결정론으로 구분되나, 두 시각 모두 기술과 사회변화는 밀접히 상호연동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다. SNS 이용자일수록 개인의 자유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며, 정치참여에 적극적이고 특히 비제도적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기술은 향후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정치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 모델 역시 이러한 기술과 사회변화의 양상에 따라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대의민주주의, 대표와 참여의 충돌, SNS, 네트워크 정치참여

I. 서론

19세기 산업화 혁명과 함께 탄생한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21세기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적합한 정치제도일까? 우리나라가 각종 민주주의 지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면서도 정부와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왜 날로 떨어지고 있을까? 대의민주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8-B00010).

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투표 참여율은 날로 하락하고 있는데, 비제도적 정치참여인 길거리 시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몇몇 기관들은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한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발표한 2011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5개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들 중 8.06점으로(10점 만점) 22위를 차지하였다.¹⁾ 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Polity IV Project 역시 한국에 8점을 부여함으로써(최저 -10, 최고 +10), 한국을 상당수준의 민주주의 체제로 평가하고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은 그다지 밝지 않다. 무엇보다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 예로 한국의 경우 대의 제도의 민주적인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장 강한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힌다. 최근 동아시아연구원(EAI)³⁾의 국제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이 조사대상 19개국의 평균이 44%인데 반해 한국은 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Yun and Min 2012, 147). 이러한 현상은 대의제도의 작동방식과 능력이 시민의 기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Norris 2011). 왜 대의제도와 시민의 기대 간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간극은 점차 더 커지고 있을까? 아마도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방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은 대의제도의 업무수행능력이 점차 떨어져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도 작동방식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증가의 원인을 두 번째 가능성에서부터 찾고자 한다. 즉 대의제도의 수행능력의 저하보다는 시민들의 참여욕구 증가가 대의제도 불신의 보다 큰 원인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각종 민주주의 지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볼 때 대의제도 불신을 제도의 수행능력의 문제로만

1)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발표한 2011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에 속한다. 167개 대상국을 크게 4개 범주로 나누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민주주의 지수 8-10점) 25개국, 흠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민주주의 지수 6-7.9점) 53개국, 민주와 독재 혼합 정권(hybrid regimes)(민주주의 지수 4-5.9점) 37개국, 독재정권(authoritarian regimes)(민주주의 지수 4점 미만) 52개국으로 분류하였다(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2011).

2) Polity IV Project (www.systemicpeace.org)

3) 유엔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경향신문, 세계여론네트워크(WPN),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위기’ 여론조사이다. 이 조사는 5대륙 19개국 1만952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국제의원연맹(IPU) 주관/ WPO, EAI, 매일경제 공동 24개국 세계여론조사 2009).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의 향상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시민들의 참여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달톤(Dalton 2009)은 미국인들의 정치의식과 참여행태를 분석하면서 교육수준의 향상, 인지적 동원의 확대, 세대경험의 확연한 차이가 시민성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달톤은 민주적 시민성을 의무적 시민(Dutiful Citizen)과 참여적 시민(Engaged Citizen)으로 구분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참여적 시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무적 시민은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법과 규율을 준수하고 기존의 권위와 정치적 질서에 대한 의무를 중요시하는 반면, 참여적 시민은 자기표현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훌륭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여긴다(Dalton 2009). 이와 같은 참여적 시민성의 확산은 대의제도에 대한 불신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역시 참여적 시민을 확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윤성이·김주찬 2011). ICT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활용행태와 시민의식 사이에 주요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주장이다. 웹1.0 기술의 경우 의무적 시민성과 그리고 SNS는 참여적 시민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웹1.0 기술의 경우 정보생산과 공유를 주도하는 권력이 소수의 허브 웹사이트에 집중되었던 반면, 개방성과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SNS의 경우 개별 노드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시켜 시민참여의 효율적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윤성이·김주찬 2011). 셔키(Shirky 2008) 역시 SNS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수직적 권력체계가 수평적 권력구조로 바뀌어 갈 것이라 주장한다. SNS가 다원화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무엇보다 참여의 능동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권력주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Shirky 2008).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시민의 참여욕구 증가는 결과적으로 시민과 정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참여 기제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정치 투입기능은 빠르게 증가시키는 반면에,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 및 제도권은 시민 참여의 수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양자 사이의 괴리를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네트워크 정치참여 간의 충돌현상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2008년 촛불은 제도정치뿐 아니라 운동조직에 의한 수직적 동원구조를 거부하면서 네트워크 정치의 출현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2008년 촛불시위가 석 달

넘도록 지속된 것은 정치제도가 네트워크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수용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윤성이 2009a).

한국 사회에 있어서 민주화와 정보화의 정착은 정치 참여 및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가치체계의 변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재성찰하고,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가치체계와 행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져오는 정치의식 및 정치참여 행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네트워크 방식의 정치참여와 대의민주주의 제도 간의 충돌지점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구조를 파악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가장 불만을 가진 집단이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 참여지향적 체제를 원하는 집단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시민의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SNS가 정치의식과 정치참여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단초를 얻고자 한다.

II. 기술 발달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기술의 진화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양식을 추동할 것인가? 그간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논쟁은 ‘대표’와 ‘참여’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와 참여 두 이론은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관점’에서 시각의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블라우그(Blaug 2002)는 민주주의 모델을 현직자 민주주의(*incumbent democracy*)와 비판자 민주주의(*critical democracy*)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비판자 민주주의는 대표자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고, 시민들의 실제적 참여를 통해 통치의 정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정치과정에 소외된 집단이 없을 때, 그리고 대표의 정치적 의지가 일반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강요되지 않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본다(윤성이 2009b, 154). 이를 위해서 비판자 민주주의는 광장(forum)을 기반으로 한 개인들의 직접적이고 협의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한편 현직자 민주주의는 참여의 효과성은 제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참여의 저하가 엘리트 중심적 의사결정의 질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우

려한다(Blaug 2002, 106). 결국 민주주의 모델을 둘러싼 ‘대표’와 ‘참여’ 논쟁의 핵심은 참여의 방식으로 귀결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현직자 민주주의가 제도를 통한 참여를 근간으로 한다면, 비판자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직접적 참여가 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기술의 진화가 이러한 참여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ICTs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두 가지 모델 즉 ‘대표’와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보사회 연구의 오래된 논쟁 가운데 하나이다. 기술의 사회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결정론(social determinism)과 기술결정론(technology determinism)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사회결정론의 시각에서 기술의 발달과 기술 활용의 양상은 기술이 적용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사용자의 욕구와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한편 기술결정론에서는 기술 자체가 사회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변인이며, 여기에 인간의 욕구와 의지가 작용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한다(Baym 2010, 44). 즉 기술은 외부 행위자로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것이다(Baym 2010, 24). 위너(Winner 1986, 35)는 기술은 자체에 내재된 동학에 의해 발전하면서 자체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형성해 간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 역시 한 사회 속에서 확산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질서를 만들고(Webster 2002), 매체 특성에 합당하는 특정한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게(May 2002, 25) 된다는 것이 기술결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초기 정보사회 연구를 이끌어 갔던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이러한 기술결정론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보사회 낙관론자들은 인터넷 기술 자체에 자유, 공동체, 평등, 이타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라인골드(Rheingold 1993), 네그로폰테(Negroponte 1995), 그로스만(Grossman 1996), 그리고 래쉬(Rash 1997) 등은 인터넷이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만들고 강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기술이라고 예찬하였다. 평등화 가설(equalization thesis)로 대변되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이 확산되면 일반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엘리트와 일반시민 사이의 권력의 격차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정보사회 비관론자들은 인터넷 기술에는 사회통제, 규율, 그리고 권위적 질서와 같은 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며, 인터넷이 권위주의 통치에 더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기술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자체만의 내재적 특성이 있다는 기술결정론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Chadwick 2006, 18).

한편, 사회결정론 시각은 사람이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Baym 2010, 24). 사회결정론에 따르면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사회 계급, 정치권력, 그리고 개인적 특성과 비기술적 요소가 기술발달과 활용의 방향을 설계하고 통제한다(Chadwick 2006, 18). 따라서 인터넷 기술 역시 새롭고 특별한 점이 없으며, 그 효과는 인터넷이 활용되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사회결정론자들의 주장이다(Chadwick 2006, 19). 즉 인터넷이 사회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그 변화의 내용과 방향은 기술이 아닌 그 사회의 정치적 맥락, 그리고 사용자의 힘과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회결정론 시각에 따르면 인터넷 기술의 확산이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터넷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집단들에게 새로운 정보 소스를 제공해 주기는 하나, 인터넷 접근의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적 정치참여를 조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Davis and Owen 1998, 185).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인터넷이 갖는 쌍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과는 기존의 TV나 신문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머독과 골딩(Murdock and Golding 1989) 역시 비록 인터넷이 점차 사회 모든 계층으로 확산된다 할지라도 거의 모든 전통적 정치참여 행태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대로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인터넷이 새로운 시민참여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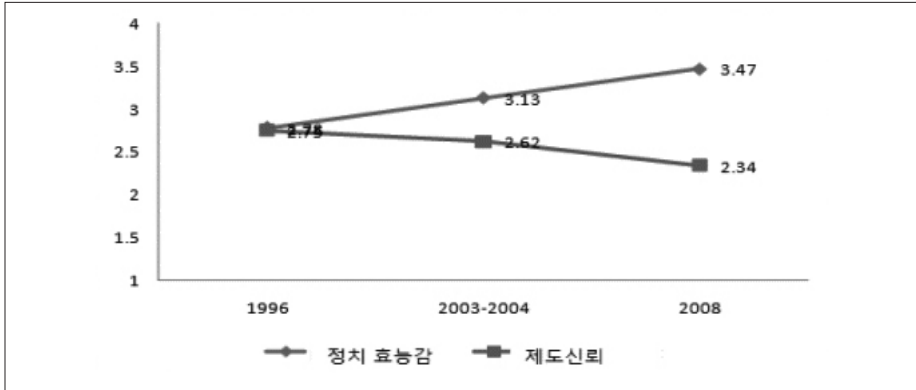
기술과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해 기술결정론과 사회결정론 양자 모두를 취하는 절충적 시각도 있다. 절충적 시각에서는 기술이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는 있으나, 이것이 사회변화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으며, 다만 특정한 변화를 창출하는 데 영향은 준다고 주장한다(Katz and Aakhus 2002). 다시 말하면 기술이 그 자체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는 없지만 과거와는 다른 방향의 역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Douglas 1999, 20). 결국 절충적 시각은 기술, 사람, 그리고 제도 모두 기술 활용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Lievrouw 2006, 250). 즉, 기술 활용의 사회적 결과는 기술과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의 발달이 사회정치적 변화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으나,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절충적 시각을 따른다. '대표'와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모델에 관한 논쟁에 있어 많은 학자들이 대의제 민주주의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균열의 조짐이 보였다고 주장한다(임혁백 2000).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신세대의 등장인 전통적인 정치매개 집단인 정당, 시민단체, 그리고 미디어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Norris 2002; Barber

1998). 특히 노리스(Norris 2002)는 ICTs의 발달로 인해 시민참여의 범위와 내용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개인들의 정치참여가 제도적 영역이 아닌 비제도적 영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체제와 이해표출체제가 급속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정치적 소비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생산자로 정치과정 자체를 주도하고자 한다(Norris 2002). 탭스콧(Tapscott 2008, 131-135)은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세대를 N세대라 칭하며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이전 세대와 달라 기존 권위에 도전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N세대의 특성은 한국의 2008년 촛불시위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2008년 촛불시위 당시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동원된 참가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저항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존 매스미디어와 같은 정치적 매개집단들을 거부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저항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전상진 2008; 윤성이 2009a).

III. 누가 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하는가?

한국경제의 외적규모는 날로 성장하고 있고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1996년 2.75점(5점 척도)에서 2003년에는 2.62점으로 그리고 2008년에는 2.34점까지 하락하였다. 다른 기관의 조사를 보더라도, 국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6년에는 49%이던 것이 2003년에는 15%, 그리고 2006년에는 9%로 떨어졌다. 정당에 대한 신뢰 역시 1996년 39%에서 2006년에는 7%로 급격히 하락하였다(Yun and Min 2012, 157). 한편 개인의 정치효능감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개인의 정치효능감은 1996년 2.78점(5점 척도)에서 2003년에는 3.13점으로 그리고 2008년에는 2.38점까지 상승하였다. 결국 시민들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점차 떨어지고, 스스로 참여해서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자신감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도에 대한 신뢰는 정치과정의 산출(output) 영역에 해당하고 정치효능감은 투입(input) 부문과 관련이 있다. 제도신뢰가 정치과정과 정치체제의 수행능력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라면,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Erikson and Tedin 1995). 달리 말하면 시민들이 갖는 ‘대표’에 대한 신뢰는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ABS(1996-2008)⁴⁾

〈그림 1〉 정치효능감과 제도신뢰 간의 차이

점차 하락하는 반면, ‘참여’에 대한 욕구와 자신감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체제의 산출과 투입 사이의 불균형 현상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온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만은 시민들의 정치참여 욕구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길거리 시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위의 대상은 정부 및 제도권 정치가 절대적으로 많았다(윤성이 2009a, 159-160).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정부와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윤성이 2009a, 157-158).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정치시스템의 투입과 산출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때 정치 불안정 현상이 도래하게 되며, 여기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이 ‘대표’와 ‘참여’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대표’와 ‘참여’ 간의 충돌을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현상을 분석한다. 또한 SNS가 이러한 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설문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10년 11월 23일부터 1주일간 전국 13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부실한 응답 및 결측치를 제외하고 전체 722개의 설문을 확보하였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

4) 제도 신뢰 질문: 귀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귀하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표 1〉 민주주의 의식구조 유형

유형	①만족 x 대표	②만족 x 참여	③불만족 x 대표	④불만족 x 참여
숫자 (%)	216명 (29.9%)	201명 (27.8%)	143명 (19.8%)	162명 (22.4%)

족도와 민주주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민주주의 의식구조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는지 혹은 불만족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대표자 선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기준으로 ① 만족 x 대표 ② 만족 x 참여 ③ 불만족 x 대표 ④ 불만족 x 참여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제1유형은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면서 민주주의 발전 역시 대표를 중심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제2유형은 현재의 민주주의는 만족하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지금 보다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집단이다. 제3유형은 현재 민주주의는 불만족스럽지만 그 개선방안은 대표중심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집단이다. 제4유형은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족하면서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분포는 <표 1>과 같이 ①유형 29.9%, ②유형 27.8%, ③유형 19.8%, 그리고 ④유형 22.4%로 나타났다. 네 가지 유형 가운데 ‘대표’와 ‘참여’ 간의 충돌이 가장 현저히 나타나는 집단은 ④유형이며, 반대로 대표중심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집단은 ①유형이다. 이들 집단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의식구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보았다(<표 2>). 이를 위해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주주의 의식구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으로는 연령, 이념, 사회질서, 경제성장, 효율성, SNS 이용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연령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각 변수와 민주주의 의식구조 형성 간의 구체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우선 민주주의 의식구조와 연령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만족 x 대표 집단의 평균 연령이 50.55세인데 비해 ④불만족 x 참여 집단의 평균 연령은 39.9세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현재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면서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반면, 젊은 연령층은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많을

〈표 2〉 “민주주의 의식구조”와의 상관관계

		연령	이념 성향	SNS 이용	질서 자유	경제 환경	효율성 다양성	정부와 이견	4대강 결정	시위 참여
민주 주의 의식 구조	Pearson 상관 계수	-.257	.177	.119	.179	.122	.129	.158	.143	.147
	유의 확률	.000	.000	.001	.000	.001	.001	.000	.000	.000

〈표 3〉 “연령과 민주주의 의식구조”와의 상관관계

민주주의 의식구조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df	F	유의확률
①만족 x 대표	216	50.55	15.471	3	17.998	.000
②만족 x 참여	201	43.14	15.085			
③불만족 x 대표	143	44.52	14.201			
④불만족 x 참여	162	39.90	13.334			

뿐 아니라 대표를 불신하면서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두 가지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는 젊은 층이 갖는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단순히 대의제도의 수행능력에 불만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의제도 자체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며 참여지향적 정치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선거에서 나타나는 2040세대와 5060세대 간의 갈등양상이 단순히 정당과 후보에 대한 선호의 차이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보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념성향에 따른 민주주의 의식구조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만족 x 대표 집단의 이념 값이 2.52(5점 척도)인데 반해 ④불만족 x 참여 집단은 3.04로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두 변수 간 교차분석을 해 보면 보수성향의 경우 40.1%가 ①만족 x 대표 집단에 속하고 ④불만족 x 참여 집단은 19.2%인데 반해, 진보집단의 경우 18.6%가 ①만족 x 대표 집단에 그리고 31.1%가 ④불만족 x 참여 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이념성향에 따라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도 달리 나타날 뿐 아니라 선호하는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어, 진보 성향일수록 엘리

〈표 4〉 이념성향과 민주주의 의식구조와의 상관관계

민주주의 의식구조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df	F	유의확률
①만족 x 대표	216	2.51	0.900	3	14.172	.000
②만족 x 참여	201	2.83	0.867			
③불만족 x 대표	143	3.06	0.991			
④불만족 x 참여	162	3.04	0.971			

〈표 5〉 SNS 이용정도와 민주주의 의식구조와의 상관관계

민주주의 의식구조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df	F	유의확률
①만족 x 대표	216	1.69	0.847	3	3.453	.016
②만족 x 참여	201	1.89	0.861			
③불만족 x 대표	143	1.78	0.806			
④불만족 x 참여	162	1.95	0.876			

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참여민주주의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SNS 이용여부와 민주주의 의식구조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기술의 발달이 사회정치적 변화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으나,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절충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절충적 시각에 따르면 SNS와 같은 기술활용 행태의 차이가 개인의 정치의식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SNS 이용정도와 민주주의 의식구조 간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만족 x 대표 집단의 SNS 이용점수가 1.69(4점척도, 1: 거의 사용하지 않음, 4: 거의 매일 사용함)인데 반해 ④ 불만족 x 참여 집단은 1.95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SNS가 개별 노드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시켜 시민참여의 효율적 매체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SNS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에 비해 훨씬 참여지향적 정치의식을 갖고 있다는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윤성이·김주찬 2011).

<표 6>에서는 민주주의 의식구조에 따른 민주주의 관련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사회질서 유지와 개인의 자유보장 간에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개인자유보다는 사회질서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①만족 x 대표 유형의 경우 53.3%가 사회질서 유지가 가장 우선시 되어

〈표 6〉 민주주의 의식구조와 질서 대 자유 간의 교차분석

민주주의 의식구조	질서유지 가장우선	질서유지 다소우선	개인자유 다소우선	개인자유 가장우선
①만족 x 대표	114(53.3%)	51(23.8%)	34(15.9%)	15(7.0%)
②만족 x 참여	65(32.3%)	72(35.8%)	39(19.4%)	25(12.4%)
③불만족 x 대표	52(37.4%)	44(31.7%)	33(23.7%)	10(7.2%)
④불만족 x 참여	46(28.8%)	49(30.6%)	46(28.8%)	19(11.9%)
전체	277(38.8%)	216(30.3%)	152(21.3%)	69(9.7%)

Sig. .000

〈표 7〉 민주주의 의식구조와 효율성 대 다양성 간의 교차분석

민주주의 의식구조	효율성 매우 중요	효율성 다소 중요	다양성 다소 중요	다양성 매우 중요
①만족 x 대표	50(23.6%)	47(22.2%)	65(30.7%)	50(23.6%)
②만족 x 참여	27(13.5%)	33(16.5%)	81(40.5%)	59(29.5%)
③불만족 x 대표	19(13.5%)	29(20.6%)	49(34.8%)	44(31.2%)
④불만족 x 참여	27(16.8%)	24(14.9%)	46(28.6%)	64(39.8%)
전체	123(17.2%)	133(18.6%)	241(33.8%)	217(30.4%)

Sig. .005

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④불만족 x 참여 유형은 28.8%에 그쳤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을 보면 ①만족 x 대표 유형은 22.9%에 불과하였으나 ④불만족 x 참여 유형에서는 40.7%로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중 하나인 개인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 두 집단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만족 X 대표 집단과 ④불만족 X 참여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만족 X 대표 집단의 경우 45.8%가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효율성을 더 중요시 한 반면, ④불만족 X 참여 집단은 68.4%가 다양성을 더 강조하여 양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표 8>은 ①만족 X 대표 집단과 ④불만족 x 참여 집단 간의 차이를 정리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④불만족 x 참여집단은 20대, 30대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념적으로 진

〈표 8〉 ④불만족 x 참여 집단과 ①만족 x 대표 집단 간의 차이

	구분	④불만족 참여 집단	①만족 대표 집단
연령	10대	0.6	0.5
	20대	25.3	10.7
	30대	27.2	12.0
	40대	22.2	24.1
	50대	16.0	24.5
	60대	8.6	28.2
이념성향	보수	34.0	53.3
	중도	32.1	31.5
	진보	34.0	15.3
SNS 이용여부	전혀 사용하지 않음	35.2	51.9
	거의 사용하지 않음	40.1	31.5
	자주 사용하는 편임	19.1	12.5
	거의 매일 사용함	5.6	4.2
시위참여	전혀 없다	71.6	89.4
	별로 없다	11.7	6.9
	약간 있다	16.7	3.7
	아주 많다	0	0
온라인참여	전혀 없다	61.7	80.1
	별로 없다	13.0	6.9
	약간 있다	24.1	10.6
	아주 많다	1.2	2.3
질서대자유	질서유지가 가장 우선	28.8	53.3
	질서유지가 다소 우선	30.6	23.8
	개인자유가 다소 우선	28.8	15.9
	개인자유가 가장 우선	11.9	7.0
경제대환경	경제가 가장 우선	12.4	25.7
	경제가 다소 우선	19.3	24.8
	환경이 다소 우선	37.9	24.3
	환경이 가장 우선	30.4	25.2

〈표 8〉 계속

구분		④불만족 참여 집단	①만족 대표 집단
효율성대다양성	효율성이 매우 중요	16.8	23.6
	효율성이 다소 중요	14.9	22.2
	다양성이 다소 중요	28.6	30.7
	다양성이 매우 중요	39.8	23.6
정부와 이견	무조건 정부	0.6	3.3
	가능한 정부	62.2	81.3
	가능한 내생각	34.6	14.0
	무조건 내생각	2.6	1.4
4대강	국회가 결정	3.7	19.3
	전문가가 결정	32.3	32.9
	주민이 결정	17.4	17.4
	국민이 결정	46.6	30.4
전체		100.0(%)	100.0(%)

보성향이 강하고, SNS 활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정치 및 사회의식의 차이도 뚜렷이 드러났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논쟁에 있어서 ①만족 X 대표 집단의 49.5%가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④불만족 x 참여 집단은 68.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탈물질주의 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과 다른 입장을 가질 경우 정부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응답 역시 ①만족 X 대표 집단이 15.4%인데 반해, ④불만족 x 참여 집단은 37.2%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대의제도에 대한 불신과 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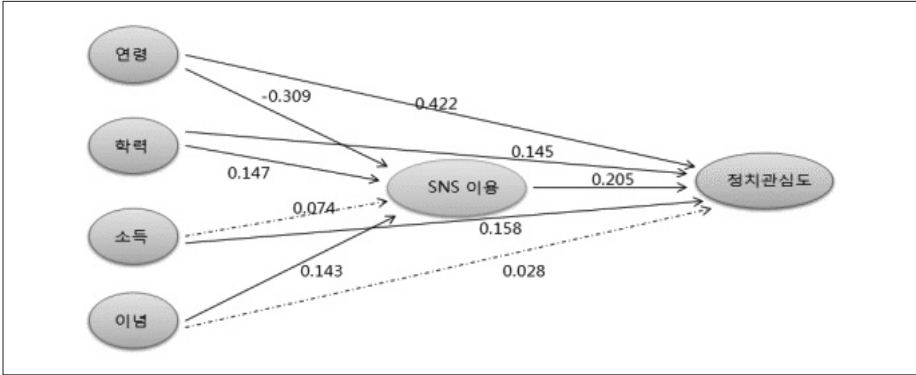
IV. SNS 이용과 민주주의 의식

이 장에서는 SNS 이용이 정치의식 및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SNS 이용이 개인의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한 시각 중 기술결정론 및 절충적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

〈표 9〉 SNS 이용과 정치의식 간의 상관관계

		성	연령	학력	이념 성향	대표 vs. 참여	질서 vs. 자유	경제 vs. 환경	시위 참여
SNS 이용 여부	Pearson 상관 계수	-.077 *	-.326 **	.295 **	.163 **	.110 **	.099 **	.105 **	.217 **
	유의 확률	.033	.000	.000	.000	.003	.006	.004	.000

다. 정보사회 정치의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은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요인이다. 과거 산업사회에도 네트워크는 존재하였으나, ICTs를 이용한 정보사회의 네트워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개인 행위자의 자율성을 증진하면서 정치과정 전반의 질적·양적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권력구조의 재편을 초래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4978만 명) 10명 중 1명 이상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으며, 만 12~49세 인터넷 이용자의 76.4%는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트위터 이용자는 2010년 6월 63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12월 조사에서는 544만 명으로 무려 8.6배가 증가하였다(통계청 2012). 이 같은 증가율은 세계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것이며, 트위터 네트워크의 조밀성과 전파력도 타 국가에 비해 매우 앞서 가고 있다. 2010년 한국의 트위터 이용자는 평균 72명을 팔로우(follow)하고, 69명으로부터 팔로잉(following) 받아, 상호 팔로잉 비율(mutual following rate)은 68.2% 그리고 네트워크 거리(network distance)는 3.8 단계로 나타났다. 전 세계 트위터 이용자의 평균 상호 팔로잉 비율이 22.1%이고, 네트워크 거리는 4.1 단계라는 점과 비교할 때, 한국인의 트위터 관계 밀도가 훨씬 높고 네트워크 거리 또한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트위터 이용자는 매우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데, 트윗 메시지에 대한 리트윗(retweet)과 리플라이(reply) 비율이 전 세계 평균 9.3%에 비교해 8배 이상 높은 75%에 달한다. 또한 전 세계 리트윗의 50%가 트윗이 생성된 지 평균 60분 안에 발생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8분 안에 발생하여 속보성이 매우 높다(장덕진·김기훈 2011).



〈그림 2〉 SNS 이용정도가 정치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1. SNS 이용과 정치의식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SNS가 개인의 민주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SNS 이용과 주요 정치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SNS 이용여부는 성, 연령, 학력뿐 아니라, 이념성향, 민주주의 모델, 탈물질주의 의식, 그리고 정치참여 행태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NS 이용여부가 정치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NS 이용여부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정치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연령, 학력, 소득 그리고 이념 등의 요인들을 포함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NS 이용여부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에도 개인들의 정치관심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001). 이념을 제외한 연령, 학력, 소득 그리고 SNS 이용여부가 정치관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NS 이용여부가 개인의 이념성향을 비롯한 여타 정치적 태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10>). 우선 SNS 이용정도와 개인의 이념성향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SNS를 거의 매일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48.5%가 자신의 이념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집단 가운데 진보성향은 19.6%에 그쳤다. 나이가 어릴수록 SNS를 많이 이용하고 이념성향 또한 진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SNS 이용과 이념성향 간의 상관관계가 연령변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변량

〈표 10〉 SNS 이용과 이념성향

SNS 이용정도	보수	중도	진보	전체
전혀사용않음	140(41.3%)	131(38.6%)	68(20.1%)	339(100%)
거의사용않음	124(43.4%)	106(37.1%)	56(19.6%)	286(100%)
자주사용	37(32.2%)	33(28.7%)	45(39.1%)	115(100%)
거의매일사용	6(18.2%)	11(33.3%)	16(48.5%)	33(100%)

Sig. .000

〈표 11〉 SNS 이용과 민주주의 발전

SNS 이용정도	올바른대표자선출	정치참여기회확대	전체
전혀사용않음	179(56.3%)	134(43.7%)	318(100.0%)
거의사용않음	132(46.8%)	150(53.2%)	282(100.0%)
자주사용	47(41.6%)	66(58.4%)	113(100.0%)
거의매일사용	14(42.4%)	19(57.6%)	33(100.0%)

Sig. .018

상관관계 분석결과 SNS 이용과 이념성향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피어슨 상관계수: .163, 유의확률: .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상관없이 SNS 이용자가 진보적 이념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여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개인의 정치의식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NS 이용자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개인의 정치참여 기회확대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SNS를 자주 사용하는 집단 중 58.4%가 정치참여 기회확대를 중요시한 반면, SNS 비사용집단의 56.3%는 올바른 대표선출을 강조하였다. 이는 SNS 이용자들이 대표와 참여라는 전통적인 민주주의 모델 논쟁에 있어 대의민주주의보다는 개인들의 참여를 우선시하는 참여민주주의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질서와 개인의 자유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회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표 12>). 그러나 SNS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개인의 자유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SNS를 자주 사용하는 집단의 39.4%가 질서유지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SNS 비사용자는 27.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동체적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으나

〈표 12〉 SNS 이용과 사회질서 대 개인의 자유

SNS 이용정도	질서유지 가장우선	질서유지 다소우선	개인자유 다소우선	개인자유 가장우선	전체
전혀사용않음	145(43.9%)	95(28.8%)	60(18.2%)	30(9.1%)	330(100%)
거의사용않음	110(39.0%)	90(31.9%)	59(20.9%)	23(8.2%)	282(100%)
자주사용	26(22.8%)	43(37.7%)	29(25.4%)	16(14.0%)	114(100%)
거의매일사용	14(42.4%)	7(21.2%)	9(27.3%)	3(9.1%)	33(100%)

Sig. .024

〈표 13〉 SNS 이용과 경제성장 대 환경보호

SNS 이용정도	경제가장 우선	경제다소 우선	환경다소 우선	환경가장 우선	전체
전혀사용않음	79(23.8%)	74(22.3%)	91(27.4%)	88(26.5%)	332(100%)
거의사용않음	41(14.40%)	71(24.9%)	81(28.4%)	92(32.3%)	282(100%)
자주사용	12(10.6%)	22(19.5%)	49(43.4%)	30(26.5%)	113(100%)
거의매일사용	5(15.6%)	5(15.6%)	12(37.5%)	10(31.3%)	32(100%)

Sig. .005

개인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의 속성이 SNS 이용자들에게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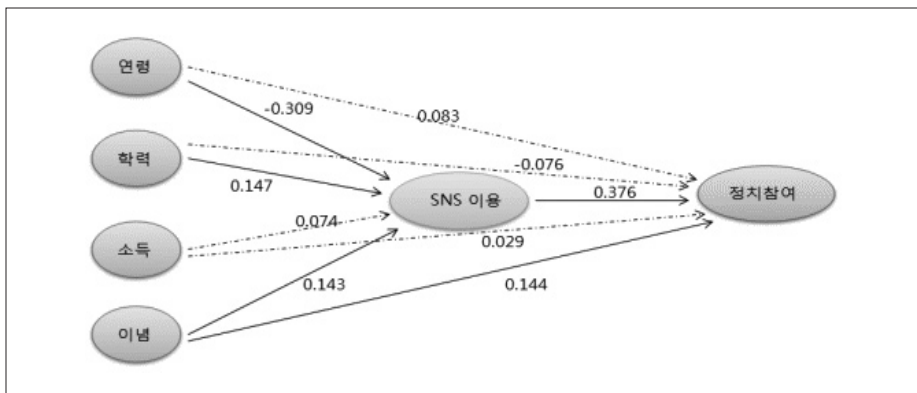
SNS 이용자가 비사용자에 비해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SNS를 자주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69.9%가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SNS 비이용자는 53.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표 13>).

2. SNS 이용과 정치참여

정보사회 초기 많은 학자들이 동원이론(mobilization theory)을 내세우며 ICTs가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권력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였다. 동원이론에 따르면 ICTs의 활용이 정치참여의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와 개인 간 정치적 상호작용을 확대시킴으로써 정치참여를 촉진하게 된다(Negroponte 1995;

Dertouzos 1997). 슈미트케(Schmidtke 1998, 69-73)는 ICTs가 정치참여의 거래비용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정치토론을 통한 집단 정체성 형성, 그리고 자원동원능력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확산되는 SNS 정치참여는 약한 연대(weak ties) 또는 네트워크 개인주의(network individualism)의 특성을 보인다(송경재 2008). SNS 네트워크 속에서 개인은 더 이상 파편화되고 고립된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약한 연대의 링크(link)로 연결된 독립적인 참여시민으로 재구성된다. 이들 네트워크 내에서는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제안하는 능동적인 시민참여가 일상화되었다. 레비(Levy 2002)는 산업사회의 시민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생각하는 시민”이었다면 정보사회의 시민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바탕으로 한 “참여하는 시민”의 특성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노리스(2002)는 정보사회의 정치참여는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며, 비제도적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비제도적 정치참여 과정에서 시민은 정치적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생산자로서 정치과정 자체를 주도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체제와 이해표출체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형식을 띠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네트워크의 확산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그림 3>에서 보듯이 SNS 사용여부는 개인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데 뚜렷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표준화 베타계수 0.376, 유의확률 .000). 여기서 정치참여 지수는 오프라인 시위 및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 정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즉 SNS를 자주 사용할수록 오프라인 정치시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게시판의 정치적 토론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연령, 학력, 소득, 이념 등 SNS 사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



<그림 3> SNS 이용여부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 14〉 SNS 이용과 시위참여

SNS 이용정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아주 많다	전체
전혀사용않음	314(92.6%)	13(3.8%)	12(3.5%)	0(0.0%)	339(100%)
거의사용않음	216(75.5%)	39(13.6%)	30(10.5%)	1(0.3%)	286(100%)
자주사용	86(74.8%)	14(12.2%)	14(12.2%)	1(0.9%)	115(100%)
거의매일사용	23(69.7%)	2(6.1%)	7(21.2%)	1(3.0%)	33(100%)

Sig. .000

력을 통제한 후 나타난 결과여서 SNS의 정치참여 영향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념 성향밖에 없었다.

앞서 살펴본 노리스의 주장과 같이 SNS 이용과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전체 응답자의 10% 정도만이 거리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제도적 참여의 정도는 여전히 낮았으나, SNS 비사용자의 경우 6.9%만이 거리시위에 참여한 반면 SNS 사용자 집단은 15.6%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훨씬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SNS를 거의 매일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24.2%가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약간 혹은 아주 많다고 응답하여 SNS 비사용자의 3.5%보다 훨씬 많은 시위참여 경험을 갖고 있었다.

V. 결론

정부 및 제도권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날로 떨어지고 반면에 길거리 시위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우리 현실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에 대한 탐색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여부와 민주주의 개선방안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현재 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 민주주의 발전방향은 올바른 대표의 선출이 아닌 시민 참여의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④불만족 x 참여지향 집단이다. 이들 집단이 설문결과로는 22.4%로 그리 많지 않으나, 문제는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SNS를 많이 이용할수록 ④불만족 x 참여지향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참여지향적 성향을 가진 집단의 평균 연령은 39.9세인데 비해 ①만족 x 대표 집단의 평균 연령은 50.55세로 나타났다. 또한 ④불만족 x 참여지향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질서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그리고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의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2040세대와 5060세대의 갈등이 단순히 선호 정당이나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의식의 차이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집단 간의 SNS 이용의 차이 역시 분명히 드러났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록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고 대표보다는 참여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들은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경제성장보다는 환경보호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들은 또한 정치참여에 보다 적극적이며, 시위참여의 경험 역시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결정론 혹은 절충적 시각에서 비취볼 때 SNS 기술 자체에 내재한 네트워크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결국 SNS 이용이 확산될수록 시민들은 정치적 소비자에 머물기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선호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사회의 대의민주주의의 모델과 충돌할 여지는 더욱 커질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환경의 확산에 따라 시민의식은 의무적 시민(dutiful citizen)에서 자기실현적 시민(self-actualizing citizen)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변화는 리더십에 대한 인식과 시민으로써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시대의 대의민주주의제도가 소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기에는 정치환경과 시민의식의 변화가 너무나 크다. 기술결정론뿐 아니라 사회결정론 시각에서도 기술과 사회변화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치제도 역시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함께 변화해 가야 한다. '대표' 중심의 위계적 권력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제도와 분산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SNS 정치참여 간의 충돌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결국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의 개선보다는 개인의 정치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참여민주주의 모델을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참고문헌

- 김기환·윤상오·조주은. 2009. “디지털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정보화 정책』 16권 2호, 140-162.
- 김용섭. 2006. 『대한민국 디지털 트렌드』. 서울: 한국경제신문.
- 송경재. 2008.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동학.” 『한국정치학회 건국6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 윤성이·김주찬. 2011. “기술세대와 시민의식의 변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1집 1호, 133-154.
- 윤성이. 2009a. “2008년 촛불과 정치참여 특성의 변화: 행위자, 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7집 1호, 315-334.
- _____. 2009b.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재성찰.” 『현대정치연구』 2권 2호, 149-172.
- 임혁백. 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오토피아』 24권 1호, 99-126.
- _____. 2000.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정연구』 6권 2호, 72-93.
-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집 5호, 31-52.
- 장덕진·김기훈. 2011. “한국인 트위터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학.” 『언론정보연구』 48권 1호.
-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1』, 1월 18일, 59-86.
- Barber, Benjamin. 1998. *A Place for Us: How to Make Society Civil and Democracy Strong*. New York: Hill and Wang.
- Baym, Nancy K. 2010. *Personal Connections in the Digital Age*. Cambridge, UK: Polity.
- Blaug, Richard. 2002. “Engineering Democracy.” *Political Studies* 50. Issue 1(March), 102-116.
- Chadwick, Andrew. 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 Douglas, S. 1999. *Listening In: Radio and the American Imagination*.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alton, Russell J. 2009. *The Good Citizen*. Irvin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Davis, R. and D. Owen. 1998. *New Media and Americ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ossman, Lawrence K. 1995. *The Electronic Republic: Reshaping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Viking.
- Katz, J.E. and P. Aspden. 1997. *Perpetual Contact: Mobile Communication, Private Talk, Publ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y, Pierre 저, 권수경 옮김. 2002. 『집단지성 —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서울: 문화과 지성사.
- Loader, D. Brian. 2007. *Young Citizens in the Digital Age*. London: Routledge.
- _____. 2003. *Governing As Governance*. London: Sage.
- Lievrouw, L.A. 2006. “New media design and development: diffusion of innovations v.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In L.A. Lievrouw & S. Livingston, eds. *The Handbook of New Media, Updated Student Edition*, 246-65. London: Sage.
- Murdock, G. and P. Golding. 1989. Information Poverty and Political Inequality: Citizenship in the Age of Privatized Communica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39. No. 3, 180-195.
- Negroponte, Nicholas. 1995. *Being Digital*. New York: Alfred A Knopf Inc.
-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sh, Wayne, Jr. 1997. *Politics on the Nets: Wiring the Political Process*. New York: W. H. Freeman.
- Rheingold, Howard.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Reading, MA: Addison-Wesley.
- Shirky, Clay. 2008. *Here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 New York: Penguin Press.
- Schmidtke, O. 1998. “Berlin in the Net.” In Cathy Byran, Roza Tasgarousainou, and Danian Tambini, eds. *Cyberdemocracy: Technology, Cities and Civic Networks*, 60-83. London: Routledge.
- Tapscott, Don. 1997. *Growing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New York: McGraw-Hill.
- _____. 2009. *Grown Up Digital: How the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New York: McGraw-Hill.
- Webster, Frank. 2002.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New York.
- Winner, Langdon. 1986. *The Whale and the Reactor: A Search for Limits in an Age of high Technology*.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un, Seongyi and Min Hee. 2012. “Democracy in South Korea: Consolidated but in Deficit.” *Korea Observer* 43. No. 1, 145-174.

ABSTRACT

Diffusion of Social Network Service and Its Challenge to Representative Democracy

Seongyi Yun | Kyung Hee University

Though many democracy indices categorize South Korea as a consolidated democracy, public trust for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institution is continuously going down. This paper argues that discrepancy of democracy indices and public trust results from a clash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NS politics.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younger generation, liberals and SNS users are more likely to dissatisfy with the current democracy and prefer to direct participation. The probability is that generational and ideological conflicts in our society are not caused by only different preferences of political parties but also by fundamentally different understanding of democracy.

Both technology determinism and social determinism agree that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have close interrelationship, regardless that which one goes first. The survey data shows that if individuals use SNS more actively, they have greater desire for personal freedom, post-materialism,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NS will be more proliferated from now on, which will cause changes in political consciousness and behavior. Therefore, model of democracy should be redesigned based on the new patterns of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Keywords: representative democracy, clash between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SNS, network participation